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43
----------	------

발의연월일: 2023년 5월 일

발 의 자: 박종각, 박광순, 안극수, 김선임,
박경희, 고병용, 김장권, 김종환,
조우현, 김윤환, 박명순, 박기범,
정연화, 박은미, 이군수, 안광림,
추선미 (이상 17명)

☐ 제 정 이 유

-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포괄적인 ‘통합돌봄’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삶의 질 향상과 성남시의 선도적인 복지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통합돌봄 지원 계획 및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가.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실행계획,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및 조사 (안 제4조~제6조)
- 다. 통합돌봄 사례관리, 협의체 규정(안 제7조~제13조)
- 라. 통합돌봄 콜센터, 교육 및 홍보, 포상 규정(안 제14조~제16조)

☐ 제 정 조 례 안 : 불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사회보장법」 제19조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통합돌봄”이란 노인이 사는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 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 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성실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남시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2. 통합돌봄 제공·지원·연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통합돌봄과 관련한 교육·홍보·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효율적인 통합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만성질환, 치매 등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2. 노인의 영양 관리를 위한 식사 및 식재료 지원 사업
 3. 노인에 대한 재활 및 운동 서비스 지원 사업
 4. 노인에 대한 요양·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사업
 5. 노인에 대한 주거 제공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6.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수단 지원 사업
 7. 통합돌봄 관리·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
 8. 통합돌봄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9.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 사업
 10. 고령친화산업 연계 및 IoT활용을 통한 디지털 돌봄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안내 및 지원 등을 위한 콜센터, 창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통합돌봄 관련 조사) ① 시장은 통합돌봄 신청을 받거나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인적 사항, 가구 특성, 거주환경
 2.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및 수급 내용
 3. 대상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 능력
 4. 대상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
 5. 대상자의 주거, 보건의료, 장기요양, 돌봄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민간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욕구
 6.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합돌봄 대상 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건강상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통합돌봄 사례관리) ① 시장은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돌봄 대상 노인의 효과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통합돌봄 사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돌봄 사례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돌봄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성남시 통합돌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합돌봄 지원사업 수행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임직원
2. 통합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통합돌봄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문단) 시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4조(통합돌봄 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통합돌봄 관련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콜센터는 통합돌봄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운영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국내외 연수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돌봄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돌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통합돌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조례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시행 중인 통합지원 콜센터 및 특화사업(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동그래미교실)의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 관계법령발췌서

【 사회보장기본법 】

-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③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